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24. (수)

총 4페이지

2026년 6월 24일 인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7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인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한선영 센터장

연락처

032-874-8297

성 명 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이후 6년, 범죄는 진화했지만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진화하는데, 피해자 지원은 왜 여전히 3명의 몫인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 지원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센터를 공식 시설화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명백한 성착취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진전

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현실은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기술 발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욱 조직화·고도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조건만남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협박과 갈취는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발간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이며 39,632건의 상담 및 통합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80% 넘는 아동·청소년이 채팅 앱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되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이다.

인천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공론화된 계기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인천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발생 지역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지역이다.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거래한 인권침해 범죄였다.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사라지기는커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 유인, 성착취물 재유포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확산되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피해는 단순하지 않다. 성착취 피해는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업 중단, 가족관계 악화, 자해 및 자살 위험, 경제적 어려움 등 삶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해

결 중심의 단기 개입이 아닌 신뢰 관계 형성과 회복 중심의 장기 사례 관리 과정이다. 복합적인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정서 지원, 의료 및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 동행, 학업 복귀, 자립 지원, 가족 상담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시 사람을 믿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사례 관리, 의료·법률 연계, 심리 치료 지원, 자립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인천 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100명 이상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통합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 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담과 개입, 그리고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통합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3명의 상담원이 긴급 대응, 사례 관리, 보호자 상담, 수사기관 협력, 법원 및 병원 동행, 지역사회 연계, 자립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범죄는 첨단화되고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책임지는 현장의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나 이 모든 역할을 최소 인력이 수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범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진정한 보호는 피해 발생 이후의 회복까지 책임질 때 완성된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인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인력을 즉각 확충하라.

현재 인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단 3명의 전담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사례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

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사례 관리 기준을 반영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인력 증원과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국가 책임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센터’로
운영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법적 고유 ‘시설’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운영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라.

하나. 온라인 그루밍 및 디지털 성착취 예방 정책을 강화하라.

정부는 SNS, 채팅 앱, 오픈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등 성착취 유인과 그루밍이 발
생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절차, 신고 체계 구축,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화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아동·청소
년 성착취 범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범죄는 진화하는데 피해자
지원 체계는 여전히 현장의 헌신에 의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보호·회복·자립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력 확충과 시설화,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등 국가의 책무를 더는 미루
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그리고 성착취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
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곁을 지킬 것이다.

2026년 6월 24일

인천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